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80
----------	------

발의연월일 : 2025. 1. 9.

발 의 자 : 고민정 · 윤종균 · 민형배  
김준혁 · 모경중 · 김문수  
전현희 · 정을호 · 김 윤  
김영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의결로 이를 해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의 기간 제한이 없어 대통령이 장기간 계엄 상태에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에 근거해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정하고, 이를 연장할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은 채, 군경을 동원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국회를 침탈한 뒤 의원 및 직원 출입을 통제하려 함.

향후 이런 위헌·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국회 심의 절차를 신

속히 하고 국회 경비와 의원 투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령 선포 후 통고를 즉각적으로 하도록 하고, 국회 역시 이를 논의하는 회의를 신속히 열도록 하고자 하며,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의2 신설).

또 계엄군 등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했는지라도, 국회가 계엄 논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 경우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2024년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에도, 국무회의 심의가 지체돼 국민의 우려가 발생했고,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심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현직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계엄군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령하고 직원을 체포하려 함. 계엄 발령 시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구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제2항 신설 등).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공고”를 “공고 및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엄 기간은 최대 14일로 한다. 단, 전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이 계엄 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려는 때에는 계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3일 전인 72시간 전까지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체 없이”를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 없이”를 “즉시”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헌법재판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선거관리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이 있은 후 2시간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대통령은 즉시 계엄 해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국가 계엄 논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 경우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계엄 선포의 <u>공고</u> ) (생략)	제3조(계엄 선포의 <u>공고 및 기간</u> )
<u>&lt;신 설&gt;</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계엄 기간은 최대 14일로 한다. 단, 전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이 계엄 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려는 때에는 계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3일 전인 72시간 전까지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u>지체 없이</u>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 ----- --- <u>즉시</u> ----- -----.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u>지체 없이</u>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 ----- <u>즉시</u> ----- ----- -----.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 · 감독)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 · 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① -----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  
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  
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  
다. <단서 신설>

<신 설>

② (생 략)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생 략)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  
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  
-----  
-----  
--. 단, 헌법재판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선거  
관리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단,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국  
무회의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  
며, 국회의 의결이 있은 후 2시  
간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가 완  
료되지 아니한 경우 심의가 이  
루어진 것으로 보고 대통령은  
즉시 계엄 해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u>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국회가 계엄 논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 경우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
<신 설>	<u>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시행 중에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u>